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	보 도 자 료	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황기연 (044-205-1401) 사무관 강준엽 (044-205-1403)
행정안전부	2021년 3월 9일(화) 조간 ※ 엠바고 : 행사 종료 후 (행사 종료시 문자로 별도 안내 예정)	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과장 김성희 (02-3150-2002) 경정 박정훈 (02-3150-2702)

2021년 정부 업무보고

「회복 · 포용 · 도약 대한민국 2021」

-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 -

< 2021년 핵심 추진과제 >

◈ **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**

◈ **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으로 국민안전 확보**

◈ **주민·의회 중심 '자치분권 2.0'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**

◈ **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추진**

≪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≫

○ **(어린이 안전)** 초등학생 학부모 강씨는 요즘 자녀의 등굣길을 보면 안심이 된다. 작년까지 등굣길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,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과속방지턱·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다. 학교 담장을 따라 통학로도 조성되었고,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활성화되자 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도 많이 사라졌다. 앞으로는 큰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.

○ **(지역사랑상품권)** 세종시에 사는 박씨는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주 사용한다. 포인트처럼 충전해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사용할 때마다 10%씩 적립되니 돈을 버는 기분이다. 예전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소비했는데, 지역사랑상품권 덕분에 소비할 곳을 찾아서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다 보니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도 커지는 것 같다.

≪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≫

○ **(자치경찰)** 김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.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.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하여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, 센터를 통해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하여 집까지 모셔주었다. 이제 경찰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.

□ **행정안전부**(장관 전해철)는 **법무부와 합동**으로 3월 8일(월) 진행한 **대통령 업무보고**(청와대-정부세종청사-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)에서 **2021년 업무계획**을 발표하였다.

○ 행정안전부는 **"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"**라는 비전을 설정하고, △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, △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, △자치분권 2.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, △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.

1. 4년간 주요 성과

□ 우선, **경찰개혁**을 위한 **제도적 기반**을 마련하였다.

○ **(수사권개혁)** 「형사소송법」·「검찰청법」 개정('20.1)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,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·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,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였다.

○ **(권한분산)** 「경찰법」 전면개정('20.12)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·자치·수사사무로 구분하고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(자치경찰사무) 및 국가수사본부(수사사무) 설치 등 지휘·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였다.

□ **코로나19**에 **신속 대응**하였고, **국가재난관리체계**를 강화하였다.

○ **(코로나19) 중대본 2차장**으로서 임시생활시설·생활치료센터 운영, 자가격리자 관리 등 **새로운 방역체계**를 전담 운영하였고, 코로나19 대응 조직·인력을 확충하였다. 또한, **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**(14.3조원)을 신속 지급(4주간 2,132만가구)하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였다.

○ **(재난관리)**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지속 확대*, 소방공무원 확충 및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**국가책임**을 **강화**하였다. 25년만에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였고,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충 및 「어린이 안전법」 제정('20.5) 등 어린이 안전수준을 향상하였다.

* ('17)14.3조원 → ('18)15.2조원 → ('19)15.9조원 → ('20)17.5조원

□ **실질적 자치분권 기반**을 확충하였고, **1단계 재정분권**을 완성하였다.

○ **(자치분권)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정**('20.2)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이양하였고, 32년만의 **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**('20.12)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.

○ **(재정분권)** 지방소비세율 10% 단계적 인상, 국고보조사업(3.6조 규모)의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등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**지방재정**을 **확충**(연 8.5조원)하고, **국세-지방세 비율**('18)78:22→('20)74:26)을 개선하였다.

□ **정부혁신 추진**을 통해 정부에 대한 **국민의 신뢰도**를 높였다.

○ **(참여·서비스)** 광화문1번가 등 **국민참여 창구**를 활성화였고, 정부서비스 통합플랫폼인 '정부24' 개통('17.9) 및 생애주기별(임신·출산·등)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**정부신뢰도**를 **제고***하였다

* (OECD 정부신뢰도) ('17)32위 → ('18)25위 → ('19)22위

○ **(데이터기반)** 공개 가능한 **공공데이터**의 **전면 개방·활용**을 촉진하고,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('20.6)하는 등 데이터 경제·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.

2. 2021년 업무추진계획

【 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】

□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, 자치경찰제 시행, 민주적 통제 강화 등 **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**한다.

○ **(책임수사체계)**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, **경찰수사의 패러다임**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**'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'**로 전환한다.

- **수사지휘** 및 **직접수사**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-시도경찰청-경찰서로 이어지는 **보고·지휘체계를 확립**하고, **시도경찰청**의 **직접수사 범위**와 **조직·인력**을 **확대**한다.
- **수사종결**의 **완결성**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, 책임수사지도관,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**내·외부 3중 심사체계**를 구축한다.

- **피해자**의 실질적인 **보호**와 **회복**을 위해 **범죄피해평가제**, **회복적 경찰활동** 등을 확대하고,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·예방하는 **수사인권담당관**을 신설하는 등 **인권보호장치를 강화**한다.

○ **(자치경찰제)** 올해부터 **자치경찰제**가 **시행**되어 생활안전, 아동·여성·청소년, 교통 분야에서 **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**를 제공한다.

- 우선 원활한 **시범운영**(~6월)을 위해 시·도별 조례 제정,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,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.

-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**전면시행**(7월~)하며,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○ **(민주적 통제)** **행정안전부·국가경찰위원회**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,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**정치적 중립성**을 확보하며,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.

【 ②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】

□ 우선, **코로나19 조기 극복**을 위해 **중앙-지방**이 **총력 대응**한다.

○ **(선제적 방역조치)**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**조기**에 **발견·차단**할 수 있도록 **임시선별검사소**,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.

-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**생활치료센터**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**예비시설**을 사전에 확보한다.

○ **(현장 백신접종 지원)** 지역 현장에서 **백신 유통·보관·접종·사후관리**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**중앙-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**를 구축하고,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.

-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**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**를 **선제적**으로 **안내**하는 **'국민비서'** 서비스를 제공하고, 백신 관련 **공공데이터**를 **개방**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○ **(전방위 대응체계 보강)**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**특별교부세**를 **교부**하고, **감염병 대응인력**도 충원한다.

- **시·도별 전담책임관제**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한다.

□ 재난의 예방·대비, 대응, 복구 등 **재난안전관리체계**를 **혁신**하여 **국민 안전**을 **확보**한다.

○ **(선제적 예방·대비) 범정부 재난안전예산**을 늘리고('20)17.5조원→('21)20.6조원), 특히 급경사지·재해위험지구 등 **재해예방사업**을 확대('20)4,970억원→('21)5,915억원)한다.

-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**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**을 추진하고, **국가안전대진단**은 위험·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**(ICT 기반 신속대응)** IoT 기반 **조기 예·경보시스템**, **지하차도·둔치 주차장**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**재난**에 **즉시 대응**한다.

- 3월부터 소방·경찰·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·소통이 가능한 **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** 운영을 시작한다.

○ **(실질적 복구)** 재난 발생 후에는,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**이주대책·공동체 회복**을 포함하는 **종합적 복구제도***를 마련·시행한다.

* 기존자치단체 시설 → 개선공공시설 + 이주대책 + 안전·커뮤니티 시설 등

- **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**(3주→1주)를 제도화하고, **풍수해보험**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하여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.

○ **(생활안전) 어린이 안전**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·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,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**응급처치 교육 의무화**를 지원한다.

- **보행자우선도로**를 설치하고, 자치단체별 **보행안전지수**를 산출·공표하여 **차보다 사람이 우선**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
【 ③ 자치분권 2.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】

□ **주민·의회** 중심 **'자치분권 2.0'**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○ **(주민 직접참여 강화)** 우선, **「주민참여 3법」 제·개정**을 추진한다. 주민이 지방의회에 **직접 조례안 제정·개정·폐지**를 **청구**할 수 있도록 「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」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, **주민소환·투표 요건 완화**를 위해 「주민소환법」·「주민투표법」을 개정할 계획이다.

-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**주민자치회**를 **본격 도입**하고,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**「지역사회 활성화 3법」*** 제정도 추진한다.

* 「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」, 「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」, 「마을기업 육성 지원법」

○ **(지방의회 역량 제고)** 지방의회의 **독립된 인사권**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방의회 **윤리특위 설치**를 **의무화**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.

-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**정책지원 전문인력**을 도입하고 **지방의정연수원 설립**을 추진한다.

○ **(자치단체 자율성 확대)**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**제2차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정**을 추진하고,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.

-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**국고보조사업**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**패키지**로 **운영**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·확산하고,

-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**기관구성 형태 다양화** 및 **특별지방자치단체** 설치를 지원한다.

□ **지역경제 회복**과 **균형발전**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.

○ **(경제위기 극복)**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**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**을 신속하게 발행하고, 취약계층·청년을 위한 **지역일자리(약 10만개)**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.

- **'착한 임대인 운동'**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·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·인하 등을 추진하고,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**지방세제·금융 지원**을 제공한다.

○ **(지방재정 확충)** 국세-지방세 구조 개편, 국가-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**2단계 재정분권**을 **추진**하여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.

-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**신세원**을 **발굴**하고, **특정금융거래정보**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**세입관리**도 **강화**한다.

○ **(지역균형 뉴딜)**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. **지역별 대표사업**을 발굴하고, 과감한 **행·재정적 인센티브**를 제공할 계획이다.

-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**규제**는 **적극 발굴하여 해소**하고, 규제자유특구·뉴딜펀드 등 **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**하여 추진한다.

○ **(지방소멸 대응)** **「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」** 제정, **고향사랑기부제** 도입,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**범정부적 지원체계**를 구축한다.

- **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**을 위해 청년마을('20)1개소→('21)12개소) 및 청년공동체('20)16개팀→('21)100개팀)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.

【 ④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】

□ **정부혁신**을 통해 **디지털 전환**을 **선도**한다.

○ **(데이터기반행정)** 수요자 중심의 **'공공데이터 개방 2.0'**을 추진한다. 인공지능(AI) 서비스, 빅데이터 분석 등 **산업적 가치가 높은**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.

- 범정부적 **데이터 공유·분석·활용 기반**으로서 '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' 운영 및 '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' 신설을 추진하고, 이를 토대로 **주요 정책**(범죄·감염병·미세먼지 등)의 **품질**을 높인다.

-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**데이터 용어·형식을 표준화**하고, 대국민 문서는 **개방형표준**으로 단계적 전환한다.

○ **(디지털 뉴딜) 모바일 신분증**(공무원증·운전면허증) 및 **전자증명서**(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)를 발급하고, 공공부문 **마이데이터**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**디지털 증명시대**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.

-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하여 **5G 국가망** 구축을 추진하고, 행정·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(정보자원 18.5만대)을 **클라우드**로 **전환**(~'25)한다.

- **민간인증서**로 **공공웹사이트**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,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**'디지털원패스'**도 확대한다.

○ **(원스톱·포용적 서비스)**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(네이버앱·카카오톡·토스앱)으로 안내하는 **'국민비서' 서비스**를 신규 도입한다.

- **300여 종의 수혜서비스**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**'보조금24'**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며, **개인별·기업별 생애주기**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.

- 디지털 약자인 **고령자**를 위해 **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** 등을 추진하고, **장애인**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**무인민원발급기** 확대, **외국어 민원서식** 확대 등 **포용적 민원서비스** 환경을 조성한다.

○ **(참여·협업)** 가칭「국민참여활성화법」 제정 및 「행정절차법」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의 **제도적 기반**을 강화하고, **온라인 청원시스템**을 구축한다.

- 기관별 참여창구는 **'광화문1번가'**를 중심으로 연계하고, 협업매칭 플랫폼인 **'협업이음터'**를 활성화하여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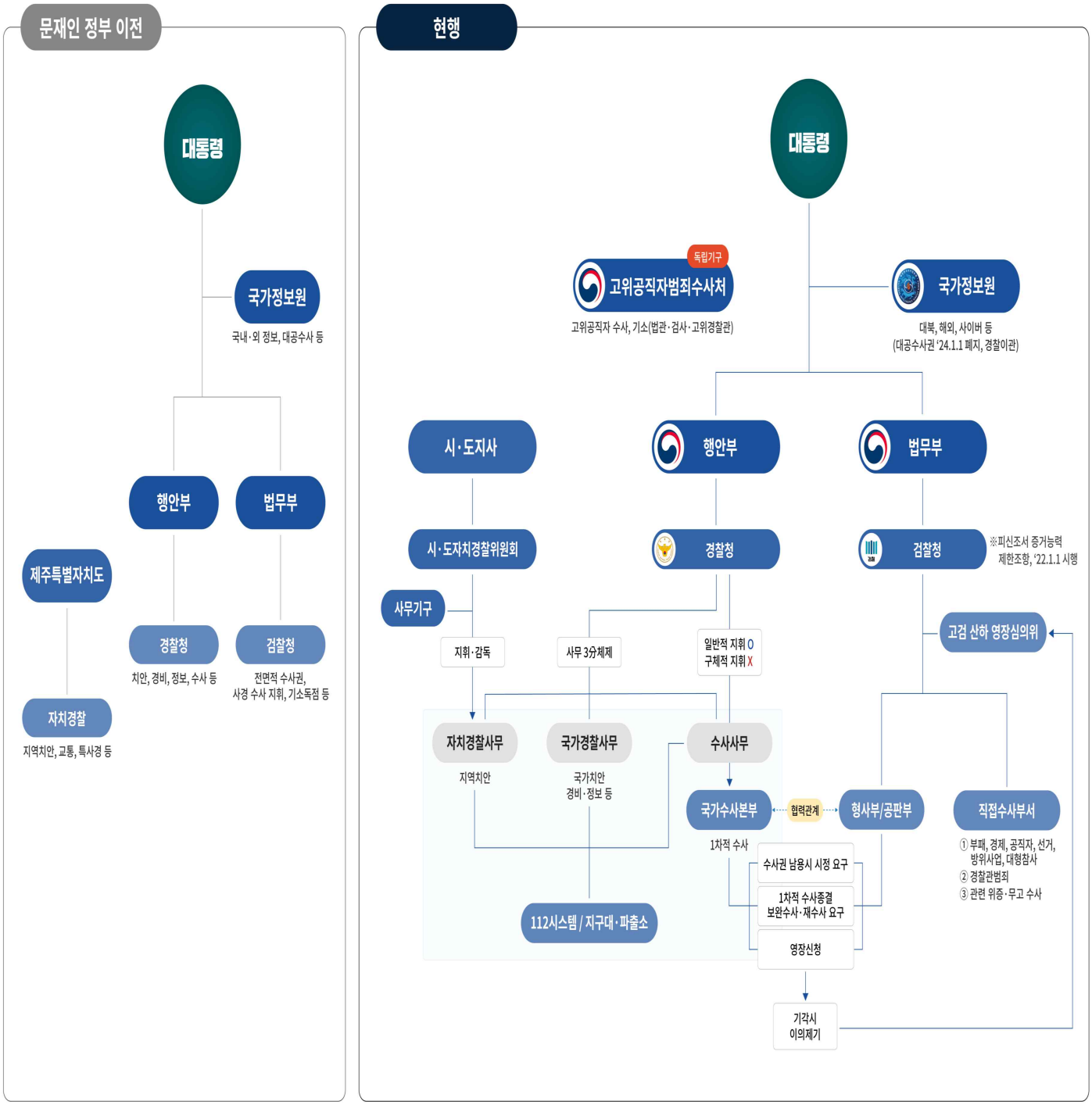
□ **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**은 “2021년 행정안전부는 ‘**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**’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면서,

○ “**경찰**이 오로지 **국민을 위한 기관**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**안전한 일상**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이어서 “**지역균형 뉴딜**, 자치분권 2.0을 추진하여 **지역에 활력**을 불어넣고, **디지털 전환**을 선도하는 **정부혁신**에 박차를 가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참고1 권력기관 개혁 체계도

문재인 정부 국정원·검찰·경찰 개혁 체계도 (2021. 1. 1 현재)



참고2 2021년, 국민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

국민 안전

112·119 구분 없이 앱 하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· 112·119 긴급신고앱을 통합한 긴급신고통합앱 서비스 개시
· 경찰·소방에 접수되는 내용을 긴급신고 중심으로 우선 처리

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으로 높은 층도 화재 걱정이 줄어듭니다.

· 그간 고가사다리차가 없던 7개 시·도에 차량 도입
 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확대로 노후소방장비 보강

일상 속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.

· 어린이이용시설(어린이집·학원 등)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
·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·신호등 설치 확대('20년 3,827개소 → '21년 8,859개소)

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· 경찰·소방·해경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
· 재난시 음성·영상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보다 신속한 재난 상황 대응 가능

지방 분권

온라인으로도 조례발안·주민소환·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.

·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조례발안·주민소환·주민투표가 가능한
  원스톱 서비스인 '자치입법플랫폼' 구축

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· 생활안전, 여성·청소년,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도입
·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

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일자리로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.

·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('20년 9.6조→'21년 15조)
· 지역일자리 10만개 창출

정부 혁신

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확인하고,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·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(300여종)·자치단체의 수혜서비스를
 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·신청하는 서비스 제공

한 번의 신청으로 임신·창업 등에 따른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· 취업·창업·노후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규 실시('20년7종→'21년14종)
·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('20년 20개 자치단체→'21년 전국)

운전면허증과 공무원증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.

· 모바일로 운전면허증·공무원증을 편리하게 발급받고,
  다양한 분야(금융거래·민원신청)에서 안전하게 신원증명 가능

'국민비서'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 때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· 개인별 생활형 정보(민방위교육·운전면허갱신 등)를 민간채널을 통해
  맞춤형으로 안내하고, 행정서비스 24시간 민원상담을 제공

행정안전부